

북한의 시장교환 질서와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홍 민**

I. 서론

II. 교환의 형태와 북한체제의 동학

III.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시장교환

IV. 시장교환과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V. 결론

Abstract

The Market Exchange Order and Amoral Familism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faced with social changes. In conjunction with these chang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market exchanges and social relations. In this study, I refer to Karl Polanyi's concept of 'reciprocity,' 'redistribution,' and 'market,' as three possible patterns of allocation.

In the socialist societies including North Korea, resources were allocated by the principles of redistribution and reciprocity. Also, these societies were organized on the basis of a hierarchical order integrated by the mechanism of a political appropriation and a redistribution, chains of personal dependencies (nomenklatura) and reciprocity relations based on the exchange of favors. The state apparatus was organized on the basis of a hierarchy of status. Status order was defined by the institution of the nomenklatura. Nomenklatura meant the list of available positions within the

bureaucratic system. The mechanism of political redistribution served the state employees who pursued for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and thereby reproduced the centralist structure and hierarchy.

Since the 1990s, in North Korea, these niches and personal network have occupied more space,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terms, within the informal exchanges system and within the reciprocity relations. The characters of social relations can be described as a fragmented morality and an 'amoral familism.' The amoral familism does not mean that people are immoral, but refers to as a tribal mentality that perceives social relations as the only personal relations and the structures as the social world with a dichotomy of us and 'strangers.' In North Korea, the amoral familism is a mirror for understanding the appropriation of market exchange within the social exchange order.

Key Words: reciprocity, redistribution, market exchange, political capital, amoral familism, appropriation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선진연구장려금지급(2004-B00006)에 의해 작성되었음.

** 동국대학교 강사

I. 서론

북한사회의 통합메커니즘은 물질적 재분배 체계, 정치적 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담론이 맞물리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계획을 ‘심장’으로 하는 계획-재분배 체계와 관료적 지위 배분의 체계가 물질적·정치적 재분배 체계라면, 도덕담론은 이러한 재분배 체계를 정치·경제적 통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체계였다. 이 재분배 체계와 도덕담론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국가, 관료, 인민의 행위 동기와 목표를 구성하며 순응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범주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은 국가 도덕담론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사회 각 층위에서 시장교환이 ‘생존’의 방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은 시장교환의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압력에 대한 국가의 반응이자 현실적 타협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시장교환을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통제영역 안에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교환이 북한 변화를 이 해하는데서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교환이 북한의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물질적 재분배 체계, 정치적 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담론이 결합하여 형성하였던 통합메커니즘 속에서 시장교환이 갖는 위상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메커니즘에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교환질서가 내장되어 있었다. 교환형태로 보면 호혜, 재분배, 시장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형태가 공존하는 교환질서에서 시장교환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적극화된 시장교환이 기존의 교환질서와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기존의 지배적인 교환질서와 갈등·대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존·결합해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당한다. 이런 물음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시장교환은 ‘생존’의 방편으로서 물질적 공급과 순환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행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시장교환이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채 돌아가는 추상의 실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동기를 통해 실천되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기존에

북한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구성해 왔던 지배적인 사회적 교환방식과 질서가 어떻게 시장교환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교환 방식에는 다양한 정치적 지배 논리와 도덕담론, 생존 논리, 그리고 물질적 재분배의 논리 등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와 시장교환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 교환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사회의 지배적인 교환형태였던 ‘호혜’ 및 ‘재분배’와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던 ‘시장’ 교환이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해 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 동기는 물론 수령, 관료, 인민들에게 전유되는 방식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배적인 사회적 교환형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는 개념을 통해 1990년대 시장교환이 사회에 전유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II. 교환의 형태와 북한체제의 동학

‘사회’란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들과 그 형식들이다. 사회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며 개인들 역시 사회의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사회는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며 실재하는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다.¹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는 실재하는 고정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² 이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위해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식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통칭하여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 교환의 동기와 형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 이처럼 “교환

¹ 게오르크 짐멜 저·김덕영 외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2005), p. 282.

² Roy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Harvester: Hemel Hempstead, 1989), p. 28, 41; Margaret Archer, Roy Bhaskar, Andrew Collier, Tony Lawson and Alan Norrie,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 II) Critical Natur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은 관계들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³이며, 특정 집단과 공동체, 국가 등은 모두 지배적인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런 교환의 내용물은 물질적인 것, 명예나 지위, 충성과 정치적 보상 등 다양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 형태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 집단 및 공동체, 그리고 국가 등이 기반하고 있는 교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market)’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호혜(reciprocity)’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증여(gift)-답례(count-gift)라는 호혜적 교환을 일컫는다. 일종의 ‘선물의 정신’⁵ 또는 ‘선물의 경제(gift economy)’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증여와 답례는 등가일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답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⁶ 선물을 주고 받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호혜에 입각한 안정을 부여한다. 하지만 답례에 응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공동체의 구속이 강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갖는다. 또 증여와 답례 사이에 존재하는 부등가 교환은 일종의 ‘선물의 정신’을 통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위장되며, 나아가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호혜적인 선물의 교환관계로 포장함으로써 지배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둘째, ‘재분배(redistribution)’는 부족적 공동체보다 확장된 국가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관계이다. 국가는 많은 수취를 위해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력

³ 베아트리스 데코사 저·신은영 역, 『노동·교환·기술』 (서울: 동문선, 1999), p. 80.

⁴ 국가조직, 경제조직, 군대조직, 노동조직 등과 같이 비교적 고정적인 대상, 즉 특정한 사회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객관적 구조물로 응축되거나 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역시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⁵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선물은 외관상으로는 자유롭고 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것’이라고 본다. 선의(善意)의 증여로 포장된 ‘선물의 정신’에는 선물 제공의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답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내장되어 사람과 사람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물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때로는 결속력과 우정이 유지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선물이 자신의 세 가지 경제 체계 모델, 즉 상호호혜, 재분배, 시장 중 첫 번째 모형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폴라니는 호혜성을 의례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무에 기초한 재화와 용역의 순환이라고 보았다. 마르셀 모스 저·이상률 역,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나탈리 지몬 데이비스 저·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칼 폴라니 저·박현수 역,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서울: 민음사, 1991).

⁶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권기돈 역, 『탐구2』 (서울: 새물결, 1998), p. 271.

을 높이는 것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을 증상으로 이전하고 이것을 재분배한다. 재분배에는 이른바 수탈-재분배라는 교환의 과정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착취적 지배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호혜적인 관계로 가장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덕적 선(유교의 ‘治世者의 德’), 이성적인 실체, 보호자 등의 위치에 서게 되고 주민들은 선의와 보호의 대가로 ‘충성’과 ‘노동’으로 보답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재분배 교환관계 속에는 물질적 순환과 정치적 지배관계가 맞물려 있다.⁷

셋째, ‘시장(market)’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른 교환을 일컫는다. 서로 등가라고 생각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에는 잉여 가치, 즉 자본이 발생한다. 등가를 가장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⁸ 시장교환 관계는 국가를 넘어 합리적 계산자인 개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시장교환은 사유권을 보장하고 사유권 보장을 통해 과세(수탈)를 챙기는 국가를 전제하며, 시장교환은 순수한 계약적 관계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와 같은 교환의 원리들을 기반으로 이들 형태들과 공존 및 결합해서 작동한다.⁹ 어느 사회에도 순수한 시장교환의 형태만 존재하는 사회는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 형태들은 한 사회에서 갖는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나 결합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공존한다. 어느 하나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세 가지 교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교환의 실천들이 ‘제도적인 응축’을 통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응축’이란 공식적인 제도나 법적 측면을 비롯해 비공식적인 정치적·경제적 관행과 전통적 유습, 사회문화적 정서 등이 교환의 형태 속에 총체적으로 개입해 있음을 뜻한다.

북한사회 역시 호혜, 재분배, 시장의 교환 원리들이 일정한 함수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사회적 공간이다. 외부와 일정하게 고립된

⁷ 지속적인 수취를 위해 수취자는 피수취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원형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더욱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재분배에 의해 토지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증하고 관개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수탈기관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농민이 영주의 보호에 대한 답례(의무)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상인도 교환을 보호해준 답례로 세금을 낸다. 그 때문에 국가는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표상된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서울: 한길사, 2005), p. 43.

⁸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송태욱 역, 『일본 정신의 기원-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 (서울: 이매진, 2003), p. 43.

⁹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서울: 도서출판 b, 2006), pp. 119~120.

‘자립경제’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수령의 은덕)과 인민이 노동이 교환되는 방식은 ‘호혜’로 가장되며, 국가에 의한 전체 생산물의 중앙이전과 독점적 재분배라는 계획 경제 시스템은 수탈을 통한 ‘재분배’라는 교환을 대표한다. 이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식 속에는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와 통합의 원리들이 함께 작동한다. 수령의 은덕과 노동이 교환되는 속에는 정치적 지배를 호혜적 관계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내장되어 있으며, 계획경제의 수탈-재분배 교환 방식 속에는 재분배를 관장하고 조절하는 권력 의지와 함께 거대한 관료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세 가지 교환방식(호혜-재분배-시장)으로 본 북한

호 혜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공동체 단위(‘자립적 민족경제’) · 중여-답례의 교환방식 · 공동체 구속-배타적 형태 · 수령-인민의 사회보장-노동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개인, 공동체-공동체, 국가-국가 사이의 상호합의에 따른 교환 · 등가교환의 외견 아래 부등가 교환-잉여, 자본의 발생 · 개인은 교환 기초단위, 국가는 제도화 단위 · 교환이 사회적 관계에 ‘묻혀’(embedded)있음.
재 분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단위 내 생산-재분배(수취-재분배) · 생산물 중앙이전-독점적 재분배(계획경제) · 국가: 도덕적 선, 이성적 실제, 보호자 · 정치적 재분배와 연동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이 호혜와 재분배 교환방식이 물질적 보장과 재분배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대체·보완을 하는 형태로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다. 여기서 ‘대체’나 ‘보완’이란 시장교환이 나머지 교환 방식을 압도하거나 독자적인 교환체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의 사회적 관계에 ‘묻혀’(embedded)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사회주의 제도화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봉합하고 억제된 인민 소비욕구의 틈새에서 은폐된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계획-재분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생계공간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교환형태에 대한 이해는 교환질서를 전유해 내는 행위자 차원의 이해 역시 요구한다. 교환관계 내부에서 행위하고 그것을 전유해 내는 북한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그것이다. 가령 지도집단과 관료, 인민

등은 각각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양한 의식과 전략 속에서 행위하며, 그것은 일정한 지배적 교환의 틀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천들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교환의 형식과 함께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자 차원의 전유는 지배적 교환질서를 호혜의 도덕담론으로 포장해 내는 공식담론 이면에서 ‘도덕’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유해 내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공식담론 이면에는 개인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담론과 실천들이 위장되어 있었다. 우선 국가는 물질적 재분배와 정치적 지위의 독점적 분배 권한을 기초로 인민에 대한 국가적 ‘돌봄’(kindness)을 강조해 왔다. 이 ‘돌봄’의 담론을 통해 인민들이 충성과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왔다. 국가-인민의 관계를 돌봄-답례의무의 관계로 규정하는 속에서 ‘지배’를 정당화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은 관료들에게도 현실논리로 전유(appropriation)되었다. 계획경제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계획의 불확실성’¹⁰을 봉합하기 위한 관료적 담합·공모를 정당화하기 위한 현실논리들이다. 이들에게 ‘도덕’은 ‘사람과의 사업’, ‘도덕적 의리’의 외피 속에서 각종 ‘본위주의’와 연줄망을 구성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들의 ‘도덕적 공모관계’는 계획과 비계획, 공식과 비공식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관료적 호혜관계의 변성을 의미했다.

인민들 역시 ‘도덕’을 그들의 노동일상 속에서 전유해 냈다. 이들에게 노동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회보장과 물질적 혜택에 대한 도덕적 근거였다. 한편으로 노동 이외에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인민들은 소박한 일탈과 노동을 그들만의 제의(祭儀)로 재전유하는 ‘일상의 정치’를 펼쳐 왔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반국가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를 ‘보호와 예속’의 틀로 간주하는 속에서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만 하는 ‘보호’가 없을 때는 개인들 간의 ‘생계 윤리’(subsistence ethic)의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¹⁰ ‘계획의 불확실성’이란 계획화 과정에서의 정보수집과 소통에서의 왜곡, 계획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장 현상, 자재부족, ‘몰아치기’ 생산, 생산의 파동성, 공장간 협동생산의 단절 등이 총체화되어 계획 자체가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점철되는 것을 뜻한다.

Ⅲ.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시장교환

1. 호혜와 재분배: 가산제적 가족경제와 북한체제

북한체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메커니즘과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규정해 온 호혜와 재분배라는 교환형태는 ‘가산제적 가족경제(patrimonial family economy)’의 원리를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란 근대 이전의 지배형태의 하나로 군주의 가계경제가 국가경제와 분리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토 안 재산과 생산물이 군주의 가계 소유로 되어 있어 그 점유·활용권을 신하에게 부여하거나 생산물을 재분배하는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체제를 말한다.¹¹

근대적 관료제와 가산제의 차이점은 관료제가 ‘공적인 헌신이나 추상적인 규범에 복종하는 비인격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가산제는 인격적인 충성’에 기반 한다는 점이다. 또 관료제가 추상적인 합법성, 비인격적인 정향, 특별한 관료적 훈련과 적법한 관할권의 한계를 통해 얻어진 합리적인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산제는 전통과 인격적인 충성과 직접적인 종속에 기반 한 행위와 관계의 형태를 갖는다.¹² 이 둘은 제도적 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들’(structures of everyday life) 속에서 구현된다.

가산제 권력의 기초는 가족 내 가장의 역할, 즉 주인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폭넓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가산제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물질적 소유의 독점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가 강한 도덕적 원리로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충성과 엄격한 위계적 질서이다. 이것은 가산제적 관계가 상호 의무의 윤리 혹은 관습적인 경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관계임을 뜻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은 계약과 등가의 경제교환 원리들이 정지된 세계로서 시장교환에 대립되는 신뢰(trusting)와 증여(giving)의 장소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 필리아(philia)의 장소이다.¹³ 가족은 이해관계 또는 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

¹¹ 베버(Max Weber)는 그것을 ‘patriachal’ 혹은 ‘patrimonial’라고 정의한 바 있다. 막스 베버 저·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1』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p. 435.

¹² Vadim Volkov, “Patrimonialism versus Rational Bureaucracy: On the Historical Relativity of Corruption,”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s 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2000), p. 36.

이 정지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가족 특유의 가치와 정서가 사회라는 단위로 확대되어 사회가 하나의 가족질서를 원리로 돌아가는 경제를 ‘가족경제’(family economy)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의 질서가 사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하나의 정서적 구조로 통합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일종의 ‘가족 정신’(family spirit)의 구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사회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정신을 통해 어떻게 구성원들을 강렬한 정서적 끈으로 결합시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자 또는 권력집단이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헌신(devotion)·관용(generosity)·유대(solidarity)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 정신’을 부여하고자 어떠한 상징적·실천적 작업을 해 왔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지배자가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지속적으로 선물(gift), 봉사(service), 도움(assistance), 관심(attention), 돌봄(kindness)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담론과 상징을 유포하는 것¹⁵과 국가적 의례나 축제들을 통해 엄숙한 정치적 상징을 교환하는 방법도 가족의 통합을 신성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⁶

이러한 가산제적 지배형태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적 해안을 제공한다.¹⁷ 북한은 이데올로기상에서 유기체적인 가족질서, 즉 사회주의 ‘대가

¹³ 이 필리아(philia)라는 용어는 ‘우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계산 정신의 거부’를 나타낸다.

¹⁴ Bruce Cumings는 북한체제를 ‘가족’의 형태로 설명한다. 그는 ‘전통적 조합주의’는 위계, 유기적 연계, 가족이라는 세 개의 커다란 주제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부권(political fatherhood), 정치통일체(body politic), 거대한 연결망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치통일체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를 위해 기능한다. 우두머리(왕)는 국민의 아버지였고,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고, 지도자의 아버지 같은 지혜와 자비는 “의지할 수 있고 결코 의심될 수 없었다.” 브루스 커밍스 저·김동노 역,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578~579.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가족주의가 민족의 메타포로 상징화 되어 왔으며 정치종교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찰스 암스트롱, “가족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종교,”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서울: 책세상, 2005), pp. 168~189.

¹⁵ Pierre Bourdieu, *Practice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68.

¹⁶ 구소련에서도 사회를 하나의 가족질서로, 지도자를 가장(家長)으로 묘사하는 다양한 담론과 상징을 사용해 왔다. 스탈린 시기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가부장적 이미지의 생산과 가족담론의 유포에 대해서는, Jeffrey Brooks,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 69~72, 89, 102, 148, 199.

¹⁷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가산제적 지배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주장은 기존에도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박형중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스테판(Stepan)과 린츠(Linz)의 개념을 빌려 북한 정치체제를 ‘왕조적 전체주의(Totalitarianism-cum-Sultanism)’라고 개념화 하면서 그것을 가산관료제(patrimonialism)의 극단적 형태를 보여주는 지배양태라고 정의한다.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44. 또 정광민은 북한의

정'을 주장해 왔다. 수령-관료-인민이 하나의 가족적 유대와 호혜의 정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가정'으로 국가를 상정함으로써 '가족'의 혈연성을 일종의 사회적 '도덕'으로 승화시킨다. 일종의 '가족국가관'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사회가 상호호혜와 도덕적 의무, 물질적 연계 속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갖는 유기체적 가족질서를 상징화해 왔다.

또 수령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가족유형의 확대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담론 차원을 넘어 물질적 자원의 생산 및 재분배 권한은 물론 정치적 지위의 재분배 권한을 독점해 왔다. 중앙집권적 제도와 계획-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결합을 통해 국가라는 가족단위의 재생산 질서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수령-관료-인민 사이의 교환을 타산적이거나 등가성이 아닌 '희생', '충성', '은덕' 등의 도덕적 의무-보답으로 이루어지는 비등가적이고 이타적인 교환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정당화되어 왔다.

이처럼 가산제적 가족경제는 수령의 정치적·물질적 재분배의 독점을 가족의 도덕담론으로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해내는 원리를 내장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유대성, 가족이기 때문에 행해야하는 호혜와 '희생', 가장(家長)과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자애로움과 공경심 등이 이 사회의 '도덕'으로 군림해 온 것이다.²⁰ 그것을 전통의 유산이나 재림으로 단순히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전통이 어떻게 사회주의체제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재해석·재채용(ré-emploi)·재전유되어 행위 실천의 논리로 힘을 발휘

경제체제가 다중적 경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수령경제'는 왕조적 전체주의의 '가산국가화'와 지극히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수령의 가산국가적 소유(사적 소유와 공사의 혼재)와 국가적 소유의 이중화, 즉 수령경제와 공식경제의 이중경제 체제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서울: 시대정신, 2005), p. 220.

¹⁸ '가족국가관'은 일본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천황가(天皇家)가 모든 일본국민의 본가(本家)가 되어 일본국민은 마치 분가(分家)가 본가에 복종하듯이 천황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와 도조쿠(同族)관계가 일반적이던 시기에 천황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담론이다. 상세한 것은 伊藤幹治, 『家族國家觀の人類學』(京都: ミネブア書房, 1982); 한경구, "일본의 전통적 임의결사와 근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동아시아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한·중·일 문화비교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서울: 백산서당, 2001), p. 172.

¹⁹ "모든 단위에서 당비서는 결국 수령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수령이 당의 총비서로서 전국의 토지를 다 소유한 대지주라면 각급 당비서들은 해당 단위에서 수령의 마름이라고 볼 수 있다."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시대정신, 2006), pp. 94~95.

²⁰ 스즈키 마사유키는 이러한 '도덕'을 수령과 인민 사이의 사랑과 의리와 충성, 온정과 효행, 즉 '은혜'와 '보답'의 교환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스즈키 마사유키 저·유영구 역, 『김정일의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71.

해 왔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²¹

이런 맥락에서 ‘가족’의 논리가 북한을 비롯한 현존했던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천의 논리로 어떻게 전유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국가가 일체의 물질적 재화를 점유·활용·수취·재분배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나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는 이 모든 권한을 사실상 독점한다.²² 이런 독점 속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공적 지위와 권한을 통해 사적인 이해를 만들고 취할 수 있다는 점, 사적 영역을 통해 공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모호하다. 법적인 차원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의성이 법적 제약을 압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²³ 이런 공사의 모호함은 ‘가족’의 논리가 관료세계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본위주의’로 둔갑할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 사회를 아우르는 가족담론과 질서가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한 ‘가족’의 논리로 전유되는 것은 일종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²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족’의 규모, 환경, 유대의 정도, 유대의 목적 등은 달라도 ‘가족’의 논리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 속에서 현실의 논리로 전유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현실에서 갖는 이중적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중적 의미는 사회를 유기체적인 ‘가족’으로 표상하는 공적 담론과 ‘가족’이 현실에서 각 개인과 집단에게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 사이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가족’ 논리는 담론과 실제, 도덕적 의무와 생존 일상 사이의 긴장을 담고 있었다. 국가를 가족으로

²¹ 김일성의 유일체제 확립과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의 상관성을 연구한 전상인은 북한의 가족정책에는 사회주의 원리와 유교적 가부장제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결합해 있다고 본다.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42.

²² 보슬렌스키 저·차근호 외 역, 『노멘클라투라(상):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 (서울: 명문사, 1988), pp. 213~220.

²³ 구소련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공과 사의 모호함과 그 속에서 번성했던 연줄관계에 대해서는,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²⁴ ‘가족유사성’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이 그의 저서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 논리와 삶의 형식을 설명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가족유사성은 한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게 공통된 특성을 갖기보다는 ‘겹치고’ ‘교차되는’ 유사성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 역시 단 하나의 공통된 본질은 없으며,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에서 ‘가족’ 논리는 공통된 어떤 형태나 특성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동일한 삶의 조건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각 층위에서 현실적 논리로 전유되고 실천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통해 구소련 사회의 블라트(blat)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로는,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34~38.

표상하는 이상적 공동체상이 공식담론상의 ‘가족’의 모습이라면, 사회 각 층위의 개인과 집단들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밀한 협력과 담합의 코드로서 ‘가족’을 현실적 의미에서 해석하고 실천한다. 담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족’의 논리들은 크게 수령, 관료, 인민이라는 세 층위의 독특한 자기 생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교환: ‘은폐된’ 공간에서 ‘생계’ 공간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은폐된’ 공간 내에서 존재해 왔다. 과거 시장의 위상과 존재 형태는 크게 ① 국가 축적체계, ② 분배의 위계 구조, ③ 공급부족의 경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장’은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국내 전체 생산을 국가가 통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을 막는 것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자금 이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했다.²⁵ 또 인민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에 부과되는 ‘거래수입금’은 공업화를 위한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과 개인적인 소상품 제작·판매는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의 강화와 국가 상업망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현실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공업 중심의 노선이 인민 소비품 관련 경공업의 상대적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농업집단화, 국가수매의 강화, 배급제의 실시는 농민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농수산물 및 생필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역시 억제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은 국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적인 물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 역할을 했다. 물론 극히 제한된 품목만이 거래되었지만, 농민시장이 살아남아 지속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일상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다.

둘째,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와 시장의 관계이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등에 따라 인민들을 계층화 했고, 이에 따라 분배 역시 차별적으로 위계화 했다. 물론 이런 ‘차별’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 사회적인 보상 및 분배의 차별이 함께

²⁵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pp. 159~162.

했다. 이런 ‘차별’은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위계화를 의미한다. 성분과 직업, 가계(家系)에 따라 분배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고 위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분배의 한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시장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 차별적인 위계적 분배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 창구 역할을 했다.

한편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인구 증가 추이에 비례한 식량 생산의 정체에 빠져 들게 되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1970년대 초반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에 비해 식량 생산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때부터 식량 생산이 인구 압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기에다 그나마 제공되던 배급량 역시 1973년경부터 전쟁미 명목으로 공제되기 시작했다. 생필품 배급사정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도시주민들의 소비생활도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소비생활의 압박은 대체로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의 하층을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농민시장 내의 교환을 소극적이거나 자극하는 배경이 됐다. 결국 농민시장이 1970년대를 거치며 미미한 형태이지만 교환의 장소로 생명력을 발휘한 것은 당시 국가의 생산력 정체와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갖는 경직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것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에서 농민시장이 ‘생계의 교환 공간’으로 적극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급부족의 경제와 시장의 관계이다. ‘부족’은 자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개별자(공장 관리자들 또는 인민들)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또는 충분히 그것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²⁸ 부족은 (물적·인적) 자원의 완전고용, 급속한 성장에 대한 중앙의 강박적 정책, 가용 자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계획, 자신들의 다양

²⁶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 171.

²⁷ 농민시장 이외에도 도시주민은 기업 수준의 후방공급활동 혹은 폐기발 경작 등을 통해서, 공장 일을 하면서 스스로 식량생산에 참가하여 부족한 식량을 획득하고 있었다. 또한 농민에게는 텃밭에서 곡물 이외의 부식물을 재배하여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농민의 ‘텃밭’, 도시주민의 ‘폐기발’, 기관·기업소의 ‘후방공급활동’, 도농 간의 농수산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농민시장’ 등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 이외에 보조적인 식량체계가 제한적인 생산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²⁸ 알렉 노브 저·대안체제연구회 역,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서울: 백의, 2001), p. 166.

한 목적으로 위해 자원을 획득하려는 부문들, 국들, 부들 그리고 지방들의 노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전반적인 부족 현상은 계획경제의 작동을 더욱 정치화(政治化)했다. 위와 아래, 또 수평적 층위에서 부족을 해소하고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과 연줄, 호혜 관계가 번성했다. 이들은 장소로서의 ‘시장(장터: marketplace)’보다는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교환(exchange)’으로서 자체의 은폐된 가격신호를 만들어 낸다. 생산수단 및 자재의 거래는 불법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한 흥정과 교섭의 대상이 됐고 ‘교환’을 위한 가격이 그들 사이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1980년대까지 농민시장 내지 시장교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시장의 공공연한 번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의 격차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주민 차원에서 차별성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소소한 일상소비품 중 한 두 개의 공급품목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준이 이들이 느끼는 차이였다. 주민들의 소비생활 자체가 평준화된 까닭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서로가 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심성들이 ‘시장’이나 ‘상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금기’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에 대한 심성의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가 통제하고 금기시하는 ‘시장교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급박한 생존에 직면해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생계윤리의 근저에는 더 많은 물질적 보장의 기대보다는 수탈 이후에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가 하는 ‘도덕적’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1990년대 전후 주민들이 시장교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현재 이후의 미래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좌절이나 공포이다.²⁹

셋째, 정보유통과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시장교환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마을 공동체를 넘어선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의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³⁰ 마을 내 물물교환 및 상호부조 이상을 넘어서는 물적 교환이 이루어지

²⁹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사는 게 낫다, 하루벌이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농사가 안되고 분배뭇이 없으니 장사하는 게 낫다라고 한다.” 탈북자 인터뷰 내용(함북 무산군 강선로동자구 광산노동자).

³⁰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1967.4~1970.6), ‘주민 요해사업’(1972.2~

기 힘들었다. 또 시장교환은 초보적이거나 일정한 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치-행정적 통제, 수송 문제,³¹ 거래의 장소 문제, ‘장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주민의 경제심성³²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공식적 거래와 교환에 필요한 정보가 통제되었다. 따라서 시장교환이라는 것은 도시와 농민시장, 소규모 마을 공동체 내부, 생산단위들 간의 필요한 것에 대한 유무상통의 비공식적 ‘거래’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에서의 시장교환은 일종의 생계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농민시장은 주민들의 배급 의존적 삶에서 소비생활의 보충적 공간이었다. 또 비공식적 ‘교환’ 행위들은 계획경제 내부에 존재했지만,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을 봉합하기 위한 ‘은폐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계획-재분배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에서 최상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민들이 생계의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교환이 배급을 대체하는 생계공간이 되었고, 계획부문의 대부분이 역시 ‘시장교환’ 없이는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시장교환에 ‘생계’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관료들 역시 지위와 특권을 이용 시장공간을 자신과 자기단위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 자재공급이 없는 속에서 시장을 자신의 계획목표를 봉합하는데 필요한 물자 공급 경로로 이용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액상계획을 할당하고 노동자들은 시장 활동에서 번 수입의 일부를 자신이 속한 공장에 상납하는 형태로 시장교환에 의존하고 있다.³³ 국가 역시 공장 미가동으로 인해 기존의 공업부문 중심의 재정수입

1974), ‘주민증 검열사업’(1980.1~1980.12), ‘주민증 갱신사업’(1983.11~1984.3), ‘러행증법’ 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인구나 노동이동에 대한 전반적 통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노동유동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목적이었다.

³¹ 수송은 공식적인 계획을 현실화하는 물리적 이동을 담당한다. 특히 동-서간의 ‘유무상통’의 교환은 사실상 수송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식적인 계획물량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간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언은,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pp. 185~187. 또 인구유동의 통제와 지역간 고립을 불러온 도시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1996년 상반기호), pp. 147~148, 152~156.

³² 소비생활의 위기가 곧바로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배급제의 유지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빈시장주의적 집합의식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구갑우·최봉태,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p. 176.

³³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형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학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2003, p. 161.

구조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2002년 이후 각종 세금항목을 부활시켜 주민들로부터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을 공식 허용하는 것을 통해 장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시장을 재정확보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지방도시의 경우 “재정의 60% 이상을 종합시장 사용료와 국가납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얽혀살고 있다”³⁴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IV. 시장교환과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1990년대 경제난은 가족경제의 원리가 각 단위와 개인에게 생존 차원에서 현실적 의미로 전유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계획경제가 더 이상 국가의 도덕담론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시장교환이 생존 차원에서 확대되는 한편, 사회의 각 층위에서 가족담론이 현실의 ‘생존’ 논리로서 해석되고 실천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³⁵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는 전 사회를 아우르고 있었던 가족경제의 담론과 질서가 국가이익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위의 이익을 우선하는 질서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최고지도자와 상층 권력집단은 인민경제보다는 정권 보존 차원에서 정치자본과 충성의 교환을 통해 ‘수령경제’의 자원 확보에만 비도덕적으로 몰두하는

³⁴ 탈북자 인터뷰 내용(회령시당 민방위부 지도원 출신).

³⁵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는 밴필드(Edward Banfield)가 남부 이탈리아 연구에서 개념화 했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가족, 조직)의 이익과 가치를 국가나 사회 전반의 이익·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밴필드는 후진사회의 저발전 원인을 소집단을 넘어선 관계와 결속, 사회공동체성의 부재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부도덕(immoral)이 아닌 비도덕 또는 무도덕(amoral)에 가깝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충성심과 가족적 친밀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논리의 과잉이며 가족의 통합성은 제공하지만 사회의 연계성을 방해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 이행, 동남아시아, 남부 이탈리아, 사하라 아프리카, 미국 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Edward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Christopher Colclough, “Structuralism versus Neo-Liberalism: An Introduction,” *States or Market? Neo-Liberalism and the Development Policy Deb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John Toye, *Dilemmas of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Diego Gambetta,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무규범’ 현상을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본 연구로는, Bruce Cumings, 『한국현대사』, p. 479;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도덕의 위기,”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서울: 당대, 2000), pp. 94~129 등이 있다.

한편, 중하층 관료들은 자신과 자기단위의 생존에 몰두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인민들은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가족 생계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생존’이라는 목적 속에서 연계된 채 작동하고 있다.

1. 수령경제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수령경제’는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는 선물비용을 비롯해 계획경제의 ‘결린 고리’를 현지지도를 통해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개인의 통치자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령경제’는 공식·비공식적인 대외교역과 국내 생산으로부터 수령이 인민경제 예산 및 지출과 별도로 통치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와 사용의 정치적 맥락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즉 외화벌이와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과 자금을 당·정·군 기구와 관료적 과정을 통해 수령의 통치자금으로 흡혈하는 일정한 자금경로이다.³⁶

이 수령경제는 과거부터 수령과 관료 사이의 특수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왔다. 수령은 통치자금을 통해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 특혜와 함께 관료적 지위, 즉 ‘정치자본’³⁷을 배분함으로써 교환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 당·정·군 고위 관료층에게 부여된 정치자본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 자원의 일정한 독점적 점유·활용권이나 외화벌이 사업에 대한 특권을 통해 경제자본화 되어 왔다.³⁸ 중하위 관료들 역시 수령 및 상층 관료들에게 충성 및 물질적

³⁶ 중앙당 재정경제부, 당중앙위원회 39호실, 중앙당 38호실, ‘충성의 외화벌이’, 사금채취, 군(軍) 및 기타 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94~306 참조.

³⁷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이란 관료적 지위와 함께 그것을 보유한 자들에게 ‘공공적 재화(관료들의 공공재화 점유·활용)와 서비스(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의 사적 전유(appropriation)’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장’이란 공식적인 전유의 허용도 있지만 비공식적 방식으로 전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원의 세습 재산화(patrimonialization of resources)’는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체계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이런 세습은 가족적 관계들의 망(network)을 통해서 전수되기 쉽다. 공산주의적이라기보다는 소련적(Soviet)이라 불러야 할 체계들이다.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³⁸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군중외화벌이’, ‘당외화벌이(5호관리부)’, ‘조선인민군 외화벌이’, ‘사회안전부 외화벌이’,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벌이’, ‘연락소 외화벌이’, ‘대성총국 외화벌이(당 39호실) 등으로 나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군(軍)이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 사회 곳곳에 권한

상납을 통해 정치자본과 지위 상승을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수령경제를 통한 공생관계에는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원리를 축으로 하는 가족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은 수령경제의 자금경로를 위협하는 상황변화였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외화벌이 사업 확장을 통해 수령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유지하는 전략이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도 외화벌이를 통한 수령경제의 자금 확보는 중요한 경로였지만,³⁹ 달라진 것은 외화벌이 창구를 좀 더 아래단위까지 확대·허용하고 일정한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각 단위와 기관들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것을 일정 비율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단위의 운영경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⁴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령경제로의 자금 및 자원의 흡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화벌이 경로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교역으로 팔 수 있는 국내 물자를 최대한 수령경제의 관리·통제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령경제의 자금유입 체계에 끌어 들여 정권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다.⁴¹ 이것은 국내 생산이 열악하고 인민소비가 낙후된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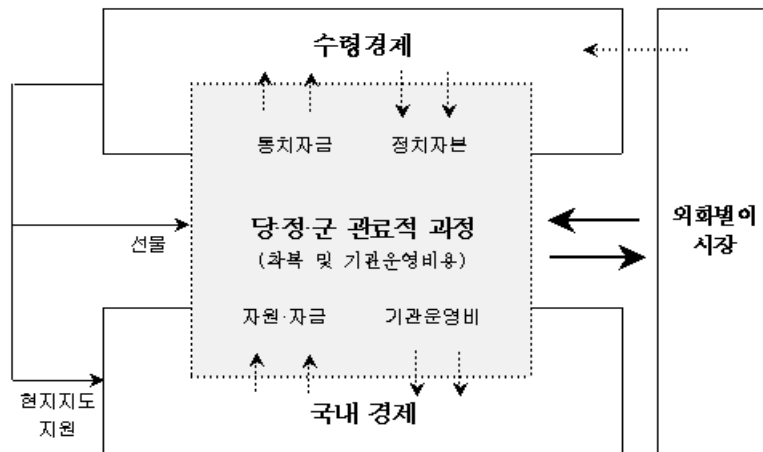
을 갖고 외화벌이 수출용 자원을 독점하고 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점대담. 배인수(순천시 운산군 김정일외화벌이사업소 운전수).

³⁹ 통치자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화벌이가 그것의 중요한 경로가 된 것은 1974년 중앙당에 39호실을 만들면서라는 견해가 있다.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p. 181. 특히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사실상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권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통치자금과 외화벌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1972년 당에 ‘제2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기거래를 포함하는 군사물품의 교역을 당의 관리하에 두는 ‘당경제화’도 작용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까지 채무불이행으로 무역거래가 급감했지만, 1977~78년을 기점으로 무역거래액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는 이를 무기수출입액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 저·정재정 역, 『북한의 경제: 기무라·형성·붕괴』 (서울: 해안, 2001), pp. 68~69. 이밖에 1974년부터 본격화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대규모 상징물 건설과 1977년 김일성 65회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전국의 어린이, 학생들에게 교복과 당과류를 ‘당자금’으로 선물해 주는 등 이런 사업에 상당한 경비의 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p. 365.

⁴⁰ 가령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등장하면서 각 시·군은 도(道)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출 원천을 스스로 찾아 외화를 벌여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받았다. 도 무역관리국의 은행계좌도 독립되었다. 중앙은 각 도가 벌어들인 외화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취해 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번 것은 너만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 먹고살고 남는 것이 좀 있으면 나라에 바쳐라”라는 식이다.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해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79~82; 신무역체계 아래서 외화벌이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 (서울: 해남, 2002) pp. 30~31.

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탈적인 성격을 갖는 수령경제로의 자원 집중을 의미했다. 계획경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은 개별 단위의 자체해결로 전가하고 수령경제는 정권의 자기보존과 특권화 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상층 엘리트를 위해 약탈적으로 국내 경제에 균림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림 2> 1990년대 수령경제의 자금경로



이와 같은 구도에서 최고지도자와 상층 관료들 사이에는 수령경제로 유입되는 자원과 자금을 집행·관리·통제 하는 속에서 특수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최

⁴¹ 북한은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충성의 외화별이’ 명목으로 외화원천동원사업을 시켜왔다. 각 지방의 당 기관들에는 39호실이 있는 데, 그 아래에 군중외화별이사업소와 5호관리부를 두고 자금채취, 짐승피, 송이버섯 수집을 한다. 5호관리부의 경우 소속은 시·군당 소속이지만 중앙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계획량은 금액지표로 할당되는데, 가령 1년에 10만 달러가 계획목표량이면 이것을 채우면 나머지는 그 사업소가 갖게 된다. 계획량을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것에 ‘뒤흔다’고 한다. “요령 좋은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한 배당(7kg)씩 따오는데 국가에 팔면 북한돈으로 7~8백원(1994년 기준)을 받는다. 거간꾼에게 비싸게 팔려는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소금에 절여 숨기기도 한다. 안전원들이 송이버섯을 국가재산이라며 은닉자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김일성이 송이버섯을 가로채는 행위는 내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같으며 송이버섯의 국가관리를 강조했다” <아~북녘동포> “외화별이에 하루가 간다” (중앙일보 1995. 1. 24일자). 윤웅씨(청진광산금속대학생 출신) 증언. “일단 일년치 10만 2천 달러 벌면, 10만 달러는 (계획량으로) 계산하고 2천 달러는 우리 사업소에서 먹는다. 그 돈으로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나누어 줄 상품을 사기도 한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에 대한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일의 평가는 몇 톤을 운반했느냐에 따라 양복지, 양복장, 이불장, 컬러TV 등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점대담. 배인수(평남 순천시 운산군 외화별이사업소 운전수) 인터뷰 내용.

고지도자는 이들에게 정치자본과 함께 외화벌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수취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들 관료들은 충성과 체제 보위라는 지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하위 관료들 역시 물질적 상납과 정치자본 제공이라는 교환관계를 적극화했다. 이들에게 정치자본은 자기단위의 생존은 물론이고 시장교환의 중요 지점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제자본을 챙길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다. 수령을 비롯한 관료들 모두 자신의 정권 안위와 정치적 지위 보존, 물질적 이해를 위해 국내경제와 인민의 희생을 전제로 약탈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교환이 경제관계와 경제운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세계의 정치적 관계 역시 시장교환이란 질서를 적극적으로 전유해내는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등가적인 호혜적 교환과 국가 독점적 재분배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수령경제 및 그 사회적 관계가 개인을 기초로 등가적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교환과 친화적으로 결합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시장화 내지 시장교환 질서가 기존의 교환질서나 체제를 침식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 북한경제를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의 이분법 속에서 어느 한쪽의 조종기제가 우월하다거나 이중구조로 보는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재음미 해 볼 것을 요구한다. 관료적 조정은 시장 조정과의 대립적·갈등적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적 조정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보하는 정치적 담합의 코드를 의미한다면, 시장적 조정은 그러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공급의 원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장교환이 호혜와 재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에 묻혀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2.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가. 계획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치자본의 폐쇄적 분배구조

북한에서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현상은 1990년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미

⁴² 과거 수령경제가 명목상이거나 인민을 포괄하는 ‘선물’의 증여체계 차원에서 수령과 관료들 간의 특수한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수령경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령과 소수 특권화 된 관료집단만의 비도덕적 자기 생존 논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부터 신분 상향이동의 원리, 관료들의 출세지향적 성향과 함께 계획경제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1990년대에는 시장교환을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 깊숙이 개입시킴으로써 좀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적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과거에는 도덕적 포장(관료적 도덕담론)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은밀한 공모의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생존 차원에서 시장교환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양태를 띠고 있다.

우선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계획경제의 문제와 정치자본의 분배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관료들의 연줄망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교환관계와 상호호혜의 관료적 공모관계를 의미했다. 관료사회의 응집은 유사-가족(quasi-familial)의 대면관계와 같이 개인적 이해로 시작해 단위의 이해를 대변하는 속에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단위들 간의 파편화된 이해로 뭉쳐진 덩어리와 같았다. 이들의 상호호혜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한 경제적 재분배의 적절한 메커니즘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관본위주의’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적, 국가적 입장을 떠나서 자기 기관, 기업소의 일시적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국가계획과제 수행에서 기관, 기업소 호상간의 연계와 협조를 거부하거나 등한히 하며 협동생산에 잘 응하려 하지 않으며 자재와 설비를 사장해 두고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의 <공명>과 <명예>,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의 리익을 꺼리낌 없이 침범하는”⁴³ 것을 말한다. 즉 기관의 이해가 국가이익을 압도하는 것을 말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계획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관료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비공식적 교환과 호혜적 연줄에 연루되고 개입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과제에 급급해 하는 ‘본위주의’로 비춰지며 결과적으로 자기단위의 이해에만 맹목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나타난다.⁴⁴ 이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적 생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 양쪽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개인화된 공식 관계와 개인화된 공적 역할 등을 기초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식 조직과 개인적 관계 사이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사

⁴³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9~120.

⁴⁴ 북한에서 통제와 폐쇄성으로 인해 가족주의가 왜곡되어 ‘비도덕적 가족주의’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23.

적 이해과 공적 기능 사이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데 있다.

여기엔 국가적 이익, 자기단위 이익, 개인적 이익 사이에서 관료적 도덕규율을 이해에 따라 편리하게 해석하며 줄타기 하는 사회주의 관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관료들의 행동이 공적인 선, 공적인 윤리와 같은 보편적 관념의 사고를 부정하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오직 위계화된 관료체계 내에서의 정치적 판단만이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사회의 ‘합리화된’ 사회적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체제를 ‘거스르는’ 행위라기보다는 강한 집단적 체제순응(conformism)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절화된 각 단위 내의 생존을 위한 비도덕적 관료행위가 결과적으로 체제순응의 집합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것은 관료 자신의 가족, 친구, 협력자와 그것이 아닌 외부자와의 이분법을 따라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일상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그것이 사회를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위안하고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보증하는 원천이 된다. 결국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은 공식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일상에서 하나의 실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1990년대 관료들의 정치자본 획득전략과 약탈적 기생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1990년대 변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더욱 적극화되었다. 과거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적게나마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단위의 생산 목표량을 채우고 계획의 불확실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주로 ‘기관본위주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시장교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속에서 적극화되었다. 1990년대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들의 정치자본 획득전략과 활용방식, 그리고 주민 장터경제에서의 약탈적 기생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치자본 획득에서는 수령과 상부에 대한 충성과 업무의 충실성, 출신성분 등이 중요했다. 1990년대부터는 충성 자체가 누더기가 된 계획의 틈새를 봉합하는 사업의 능력과 상납의 충실성으로 바뀌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정치자본이 관료세계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흡수하고 전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관료들은

경험적으로 학습했다. 그것은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한 게임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1990년대 변화된 현실에서도 정치자본을 이용해서 관료들이 쉽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체제가 부여한 게임의 논리를 아는 만큼 누구보다도 그것에 성향화 되어 있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이 체제를 거부하기보다는 적응하는 이유를 제공한다.⁴⁵

관료들의 정치자본 활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의 ‘장터경제’가 관료들이 정치자본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관료들의 정치자본은 국가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묵인과 함께 시장 통제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관료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과 자원은 정치자본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상납금과 자기 단위의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이런 관료들의 기생 방식은 ‘마피아 부족주의’(Mafia-tribalism)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마피아-기업 커넥션에서 발견되듯 관료들의 장터경제 기생은 지대추구(rent-seeking)뿐만 아니라 관료적 축적(accumulation)의 특정한 양식이 되었다.⁴⁶ 관료적 이익은 자신의 공적 권력을 통해 ‘보호된(protected)’ 시장이나 거래선들, 기업들, 사적 경제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자신의 정치자본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납금이나 뇌물로 쓰여 지거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사적 경제활동에 재투자된다. 다시 말해 시장교환을 부정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특히 이들은 이런 사업적 이익을 통해 행정을 매수하고 공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생하며 ‘보호’의 대가로 약탈을 정당화한다. 이들은 공적 지위의 이면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림자 사업가들’(shadow businessmen)이다. 이런 관료들의 행위는 사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소위 법을 집행·감독하는 자들의 행위란 점에서 ‘법안의 도둑들(thieves of law)’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⁴⁵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 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p. 8.

⁴⁶ 관료들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약탈적 기생의 방식도 다르다. 첫 번째는 공장 및 농장의 간부들, 두 번째는 당기관 소속 관료들, 세 번째는 각종 민생 관련 활동을 통제하는 치안 및 보안 관련 관료들과 요원들, 마지막으로 각종 운수 및 수송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관료들과 요원들 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기생이 관료적 삶의 일상적 코드가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⁴⁷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한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pp. 38~40.

이러한 관료적 기생은 시장을 통한 물질적 재분배 역시 결과적으로 왜곡시킨다. 생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주민들의 시장교환에 관료들이 기생함으로써 생계 위협은 물론 빈부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빈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터 교환에 몰두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반면, 관료들이나 정치자본을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물장사꾼’들은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는다. 결국 생계 이상의 이윤을 챙기고 소득을 재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금’과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머지 장터를 ‘생계’의 최종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생계’선상에서 아사를 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면 정확하다.

사실상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기보다는 개인적 이해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개인화시키는 경향을 일컫는다. 관료들은 공적인 의무나 책임에 앞서 개인적 관계로만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우리’와 ‘타인’의 이분법으로 사회세계의 구조를 인식하는 부족적인(tribal) 멘탈리티(mentality)를 갖는다. 따라서 현재 북한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과 주민경제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은 윤리적인 부도덕(immoral)의 차원보다는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적 삶의 방식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의 수령은 ‘도덕’을 상징하고 구현하는 주체였다. 수령의 혁명전통과 영도업적은 도덕적 행동과 사과의 준거가 되었다. 인민을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국가가 인민에게 사회적 보장을 베풀고 인민이 노동으로 보답하는 동기는 ‘도덕’을 통해서였다. 은혜로운 베품과 마땅한 노동의 보답이라는 호혜적 논리가 성립됨으로

⁴⁸ 이러한 ‘마피아 부족주의’와 시장교환이 갖는 관계를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설명하는 연구로는 밴필드(Edward Banfield)와 푸트남(Robert Putnam)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저발전의 도덕적 기초와 마피아나 마피아와 같은 권력관계의 도덕적 기초로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개인적 의존의 후견주의적 고리들(clientelistic chains)로 결합된 이들은 자신과 조직의 이익에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가족주의적이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모든 공적 규율과 법적 체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써 사회의 모든 관계는 이러한 논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계획경제는 이러한 도덕적 관계를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 체계였다. 또 나아가 계획경제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되어 사회구조 속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도덕의 실천 과정은 이면의 위장된 논리를 발전시켰다. 국가는 도덕을 관장하는 권위와 상징을 통해 권력이 되었다. 국가의 물질적 분배와 인민의 노동보답이라는 호혜적 담론 이면에 지배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는 물질적·정치적 재분배의 권한을 통해 더욱 현실적 힘을 발휘했다. 관료들 역시 국가의 도덕을 집행하는 대리인이었지만, 도덕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도덕을 관료적 생존의 논리로 변형시켰다. 인민들은 노동 이외의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 소박한 일탈과 노동을 그들만의 제의로 재전유하는 ‘일상의 정치’를 펼쳤다. 결국 사회주의체제는 공식적인 도덕담론을 통해 상징화 된 사회적 관계와 각 행위자들이 자기보존 차원에서 발달시킨 사회적 관계, 이 둘이 갖는 모순과 긴장 속에서 구성된 사회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총체적인 경제적 난관은 체제의 도덕적 지배를 정당화 하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덕담론의 질서 속에서 위장된 순응의 형태로 존재하던 사회 각 층위의 ‘생계윤리’들이 경제난 속에서 현실적 생계논리로 적극화되면서 개인들의 생계활동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과 자기보존이라는 생계윤리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과 자기 단위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령경제는 관료들에게 정치자본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충성과 지지, 통치자금을 확보해 왔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인민경제로 투여되기보다는 정권 안위 차원에서 수령과 상층관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전유되는 자금이란 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료들 역시 자신이 가진 정치자본을 바탕으로 자기 단위와 자신의 생존 및 자기보존을 위해 경제자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속에서 인민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생계를 위해 장터를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장터 행위는 관료들의 약탈적 기생에 노출된 채 기존의 억압적 사회적 관계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시장교환은 아직까지는 생계차원에서 ‘장터’ 내에서만 발휘되는 ‘장터개인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사회에 호혜, 재분배, 시장이라는 교환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 속에서 행위하는 국가, 관료, 인민의 담론, 전략, 실천 등이 1990년대 들어와 일정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사회적 관계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던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태가 그 물질적 기초였던 계획-재분배 능력에 위기를 맞음에 따라 시장교환이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물질적 수급의 수단으로 부상했다. 시장교환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가, 관료, 인민은 자신의 생존과 자기보존에 부합하는 일상에서의 도덕담론과 실천전략을 만들어냈다. 바로 북한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교환의 형태와 행위자들의 담론, 전략, 실천이 교직되는 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